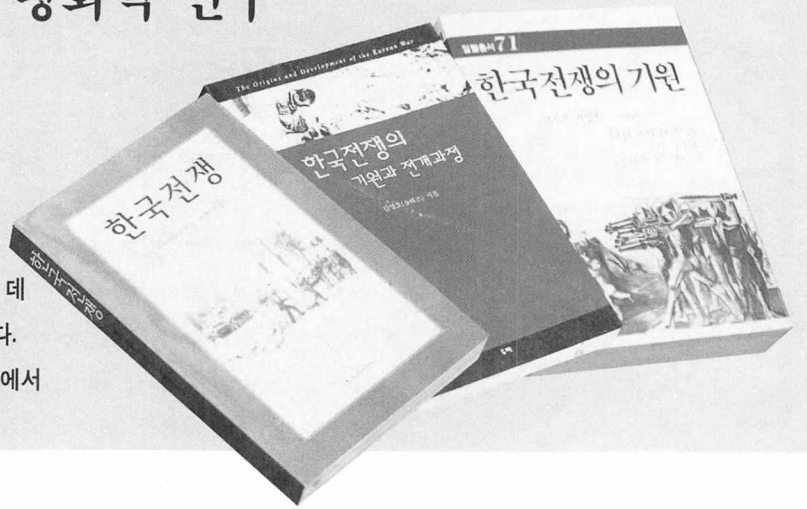


답보상태 면치 못한 한국전쟁과 평화학 연구

책으로 살펴보는 한국전쟁과 평화학 연구성과 ...
외국학자들의 이론적 성과가 주류 이뤄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도 50년이 지났다. 하지만 우리 학계의 한국전쟁 연구실적은 미미한 편이다. 이념적 금제 때문에 객관적인 접근이 어려웠던 데 그 원인이 있다.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평화학 연구 또한 뿌리내리지 못했다. 탈냉전의 시대를 맞이해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화두가 평화적 통일이란 점에서 한국전쟁과 평화학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쟁과 평화는 '극과 극'이지만, 동전의 양면 같은 현상이다. 평화의 소극적 정의가 '전쟁이 없는 상태'라는 점은 제쳐둔다 해도 전쟁과 평화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전쟁과 평화의 연관성은 서점에서도 발견된다. 전쟁 관련서와 평화를 언급한 책의 서가가 맞붙어 있다. 전쟁을 다룬 책이 수적으로 우세하기는 하나, 그것마저 얼마 되지 않는다.

미진한 한국전쟁연구

그나마 한국전쟁에 대한 연구성과를 담은 책은 더욱 적어서 책꽂이 한칸을 겨우 채울 정도다. 한국전쟁 연구자들은 나름대로 연구가 미진한 이유를 분석했는데, 현실의 중압이 너무 크다는 점에 대체로 동의한다. 전쟁을 직접 체험한 세대는 엄청난 참화에 압도된 데다가 이른바 '전후 세대'는 이념적 금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해외의 한국전쟁론이 수입돼 서가를 채운 것도 이런 정황과 무관치 않다.

특이한 것은 한국전쟁 연구서에는 '기원'이라는 제목이 들어간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그동안 학계의 연구관심이 어디에 집중됐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한국전쟁의 기원》(브루스 커밍스, 김자동, 일월서각)은 외국학계가 이론 대표적인 연구성과다. 1986년 번역된 이 책은 종래의 '남침설'을 따르지 않고, 미국의 팽창주의 대외정책과 남한 내부의 구조적 모순을 전쟁의 원

인으로 간주하는 수정주의 관점을 취했다.

브루스 커밍스 책이 번역 출간되고 꼭 10년 후에 나온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박명립, 나남출판)은 커밍스와는 또 다르게 한국전쟁의 양상을 포착했다. 지금까지 출간된 한국전쟁 연구서 중에서 가장 포괄적인 내용을 담았다는 평가를 받는 이 책은, 특히 한국측에 대한 분석이 치밀하다. 한국의 자료 공개가 가장 미흡한 형편이고 보면, 대단한 노력을 기울인 역작이라 하겠다.

피터 로우의 《한국전쟁의 기원》(김시완, 인간사랑)은 미국정책의 분석에 집중한 책이다. 로우는 1950년 5월에 이미 한반도는 내전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한편, 소진철의 《한국전쟁의 기원》(원광대출판국)은 국제 공산주의의 음모의 산물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전쟁을 바라본다. 《한국전쟁의 기원과 전개과정》(김영호, 두레)은 스탈린의 몰락전략과 미국의 외교전략을 동시에 살폈다.

국방대학원 김철범 교수는 한국전쟁 관련서를 가장 많이 펴낸 저자다. 김교수는 《한국전쟁을 보는 시각》(을유문화사), 《한국전쟁과 미국》(평민사) 등을 출간했고, 《한국전쟁—강대국정치와 남북한 갈등》《한국과 냉전》(이상 평민사)을 엮었다.

최근 출간된 《전쟁과 사회》(김동춘, 돌베개)는 기존의 한국전쟁 연구서들과 성격이 뚜렷하게 구별된다. 외교적·군사적 측면이 아니라 사

회학적 접근법을 이용해 후방에서 일어난 일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김동춘 교수(성공회대)는 피난·학살·점령의 세 국면을 통해 전선에서 떨어진 곳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졌고, 그 사건들이 이후 우리 사회에 착근된 양상을 추적했다.

한국전 참전기는 여럿 나와 있어

국방부나 육군본부가 편찬한 전사(戰史)류 서적 말고도 '한국전쟁'을 표제로 삼은 책도 여러 권 된다. 김학준 총장(인천시립대)의 《한국전쟁》(박영사)은 정치학의 관점에서 전쟁의 전체상을 묘사했고, 와다 하루끼의 《한국전쟁》(서동만, 창작과비평사)은 청소년기에 한국전을 목도한 지은이가 이웃나라에서 발발한 전쟁에 대해 나름의 확실한 인식을 얻기 위해 쓴 책이다.

매튜 B. 리치웨이 장군의 《한국전쟁》(김재관, 정우사)은 한국전 당시 제2대 유엔군 사령관을 지낸 지은이의 참전기로 한국전쟁의 발발 원인, 미국의 참전이유, 맥아더 장군의 해임 사유, 미국이 만주폭격을 못한 까닭 등을 서술했다. 《판문점 일기》(K. S. 티마야, 라운드, 소나무)는 휴전 직후 중립국 포로송환위원회 의장이었던 인도 장성의 회고록으로 인도에서의 출국 준비부터 판문점 부임 및 포로 인수, 설득 작전의 준비와 실시, 중립국을 선택한 전쟁 포로들이 인도에서 생활한 모습까지 담았다.

한국전에 참전한 국내 장군의 수기도 있는데,

한국군 최초의 4성장군인 백선엽의 《길고 긴 여름날 1950년 6월 25일》(지구촌)이 그것이다. 이 책은 《군과 나》의 개정판이다. 《6·25일지》(박찬용, 지식산업사)는 대학생 신분으로 개전 초기를 겪고, 9·28 서울수복 이후에는 통역장교로 복무한 지은이의 일기를 책으로 엮은 것이다. 역사학자 김성철의 《역사 앞에서》(창작과비평사) 역시 전쟁 초기의 모습을 보여준다.

한국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임을 일깨우는 책들도 있다. 라종일 교수(경희대)의 《끝나지 않은 전쟁》(전예원)은 공식문서에 근거한 논문과 6·25 관련 강연글 및 에세이를 모은 것이다. 이병완의 《끝나지 않은 전쟁》(명성출판사)은 국방부 전사편찬위원을 지낸 지은이가 냉전적 시각에서 안보의식을 고취한 책이다. 조지 풀러의 《끝나지 않은 전쟁》(신광수 엮음, 눈빛)은 유엔군 군사정전위 속기 주임이었던 미 해군 준위가 찍은 사진을 엮은 것이다. 풀러는 휴전 직전의 판문점과 문산의 미군기지, 경기 북부지역의 농촌 풍경을 담았다.

본격 평화학 서적은 거의 없어

평화학은 세계적으로도 역사가 일천한 학문 분야다. 국제평화연구학회가 런던에서 설립된 1964년을 기점으로 하면, 이제 40년 남짓이다. 그런데 평화학은 미래학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발흥했다. 20세기에 전쟁을 겪은 한국과 일본에서 두 학문의 수용양상이 차이를 보이는 점이 흥미롭다. 일본에서는 평화학이 미래학에 비해 훨씬 높은 관심을 끌었다.

반면, 한국에서 평화학은 미래학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 한때 《평화연구》와 《평화강좌》가 시리즈로 나왔지만, 현재는 모두 절판 상태다. 일본평화학회가 엮은 《평화학》(이경희, 문우사)은 수명이 긴 개론서다. 일본에서 1983년 출간된 이 책은 평화연구의 성격과 일본의 연구 동향을 다뤘는데, 여기서 평화는 소극적 개념이 결코 아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를 넘어 좀더 안정된 평화로운 상태를 확립하려는 적극적인 운동을 포괄한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기획한 《평화를 위한 국제선언》(백은선, 오름)은 평화운동의 국제적 조류를 잘 보여준다. 유엔과 유네스코의 평화선언 자료집인 이 책은 〈인간의 마음에 깃들인 평화에 관한 야무스 크르 선언〉 〈폭력에 관한 세비아 선언〉 〈인류의 평화에 관

한 권리선언〉 등을 수록했다. 《평화를 위한 전략》(씨셀라 북, 박상섭, 인간사랑) 또한 평화운동에 요긴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평화사상가에 관한 책으로는 우선, 《자멘호프의 평화사상》(양희석, 자유문고)을 꼽을 수 있다. 만국공용어 에스페란토의 창안자 자멘호프의 인류애와 박애정신을 담았는데, 그가 에스페란토를 만든 것도 세계 평화를 위해서였다. 대통령 퇴임 후 평화사절로 더 분주한 지미 카터의 《평화를 위하여》(제우미디어, 1994)와 평화학의 권위자 스웨덴 출신 요한 갈등 교수의 대담집 《평화를 위한 선택》(신영미디어, 1997)도 평화사상가의 궤적을 담은 책이다. 아쉽게도 카터의 평화론과 갈등의 대담집은 절판됐다.

제목에 평화가 들어간 국내서적은 얼마 안된다. 그것마저 평화학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다. 군사학의 하위 범주로 평화를 언급하는 경우가 있다. 《전쟁원인과 평화문제》(홍양표, 경북대출판부)는 지은이의 박사논문인 《전쟁원인론》의 개정판이다. 《전쟁과 평화의 연구》(김홍철, 박영사)는 현대 전쟁을 유형별로 이론과 실재를 고찰했고, 《21세기 평화론》(김상운, 남지)은 평화와 전쟁을 균형있게 다뤘다.

좀더 활발한 연구 요구돼

국내 저작으로 평화학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는 책이 전혀 없진 않다. 《평화의 정치사상》(최상용, 나남출판)은 플라톤에서 마르크스에 이르는 서양사상가의 정치사상에 나타난 평화사상을 재구성했다. 《갈등의 평화론》(최동희, 나남출판)은 국제 분쟁의 원인분석과 평화문제를 논의한 책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문제도 고찰했다.

우리에게는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이 당면과제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곽태환 외,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의 머리말을 빌어 박재규 통일부 장관(당시 경남대 총장)은 “평화체제란 단순히 전쟁의 일시적 중지를 의미하는 정전체제가 아니라, 남북한간의 실체를 인정하며 상호간 신뢰와 교류를 규정하고 주변 국가들이 이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런 점에서 평화체제로 가는 첫 걸음을 딛고 있는 지금, 《평화의 철학과 통일의 철학》을 통해 이삼열 교수(숭실대)가 제안한 내용은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이교수는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의 조건을 제시하고, 남북 국회회담의 성사를 요구했다. - 최성일 기자

